

공적연금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 강화 방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요 약

□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조치와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병행

- 기초연금 제정 절감 전제 하에, 노후소득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보완조치 도입
-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되, 저소득층에게 더 높은 연금 지급을 적용
[예: 소득수준·가입 기간별로 1.1(대체율 44%)에서 1.25(대체율 50%)까지 차등 적용]
 - 동일한 연금 지급을 원칙을 위반할지라도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
- 국민연금 보험료는 10년 이내에 최소 5~6% 포인트 인상
-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및 국민연금 인정소득을 높여서 연금을 더 받게 함.
 - 노동시장 개혁(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과 의무납입연령 5년 연장을 동시에 추진
 - ※ 의무납입연령 5년 연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 포인트 인상 효과에 해당
 -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연금 인정소득 기준 통일

□ 한국적 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자동안정장치 도입

- 중간단계의 자동안정장치인 핀란드식의 기대여명계수 채택
 - 노동시장 개편을 전제로, 기대여명계수는 2033년 이후부터 적용
- 기대여명계수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약 2% 포인트에 상응하는 재정안정 달성
 - ※ 소득대체율 40% 중에서 35%pt는 보험료 인상, 약 2%pt는 기대여명계수로 달성
 - ※ '대체율 40%-보험료 15%-준자동안정장치 도입' 해도 완전한 재정안정 달성 불가능
- 기대여명계수, 즉 준자동안정장치 도입에 따른 연금액 하락을 방지하는 조치 병행
 - 노동시장 개편을 통한 '활기찬 노후 (Active ageing)'를 전제로,
 - 기대여명계수 작동과 연금가입·수급연령을 연계하여 연금액 하락 방지 (핀란드 방식)

□ 신규 수급자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여가며 취약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

- 노인 70%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예: 2025년 월 228만원 이하)으로 선정기준 변경
- 현금급여와 현물속성급여(In-kind Benefit)로 분리(예: Housing allowance)
-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상대 빈곤선 이상의 수급자 연금액은 동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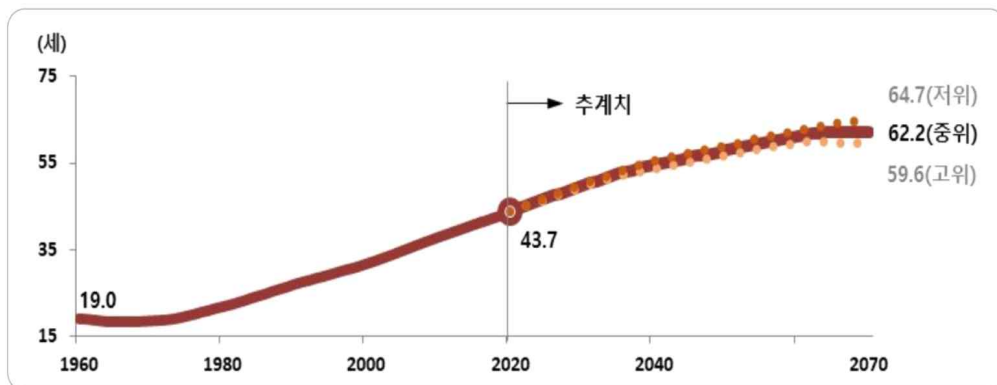
□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을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

- 개별제도와 재정의 통합이 아닌 투명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제도의 통합 운영을 의미
 - 국민연금에 상당하는 부분과 퇴직금 부분을 100% 일치시킴.
 - 공무원·사학연금 추가 부담 보험료(현재 4.5% 포인트)만큼을 DC형으로 추가 지급

1. 우리가 처한 연금 현황과 주요국들의 연금운영 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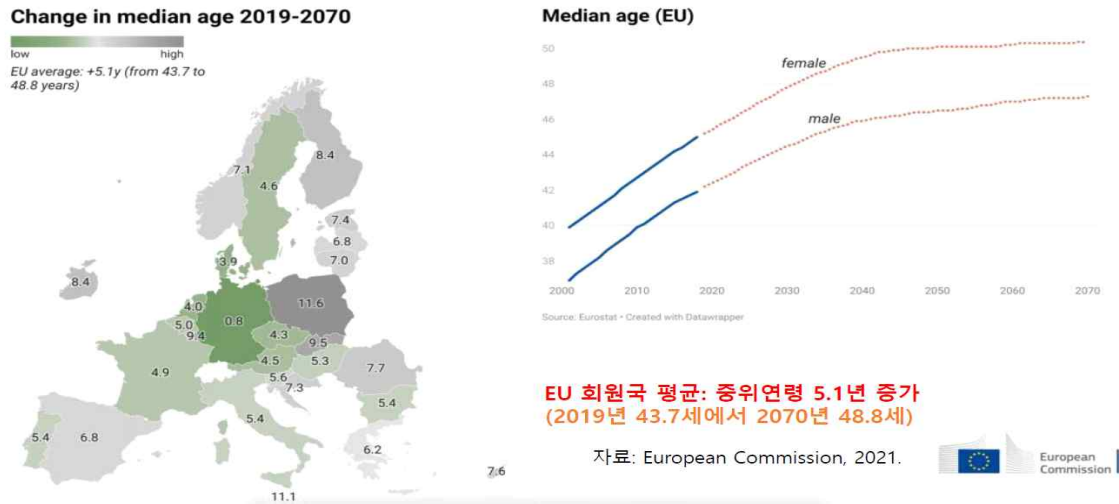
- 새로운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 즉 **현대화된 제도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음.**
 - 우리 연금제도는 2차 세계대전 직후 장밋빛 전망 하의 제도를 그대로 수입한 것임.
 - 신생국으로서, 처음부터 지속 가능한 제도 도입이 어려웠기 때문임.
 - 선진국에서 **연금개혁 TF가 가동되던 그 시점에**,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 도입
 - 1차(2003년) 국민연금재정계산 이후 연금제도가 포퓰리즘 정책 수단으로 작용
 -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역시 도입 초기에 비해 고급여 제도 운영
 - 은급제도로 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던 일본 공무원연금은 1959년 개혁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 민관 동일한 연금(Common pension) 운영
 - 연금 관련하여 동일한 사안과 팩트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과 해석
 - 글로벌 연금개혁 추세와 동떨어진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주요 원인
 - 2018년 4차 재정계산(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독일 Study Visit에서 있었던 일**
 - 독일 전문가가 바람직한 우리의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언급하려는 순간 10여명에 달하는 위원회 위원 대다수가 답변 듣는 것을 거부하였음.
 - 자신들 생각과 다른 개혁방안을 언급할 것 같아서 그러했을 듯!
 - 4차 산업혁명, KTX 운행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증기기관차 시절 연금을 논의
- **한국과 EU 회원국의 인구구조 관련 현황과 전망**

[그림] 한국 중위연령 : 43.7세(2020년) ⇨ 62.2세(2070년). **중위연령이 18.5세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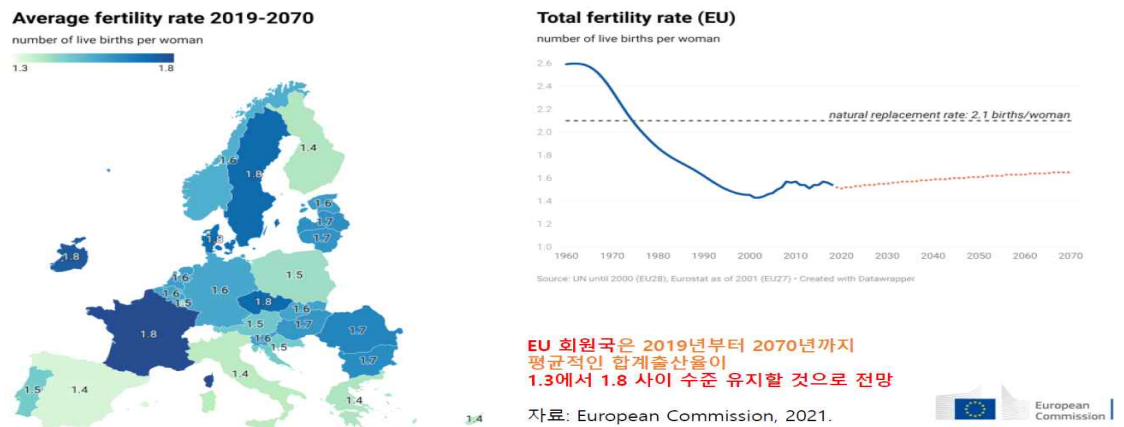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년 인구총조사 기준), 4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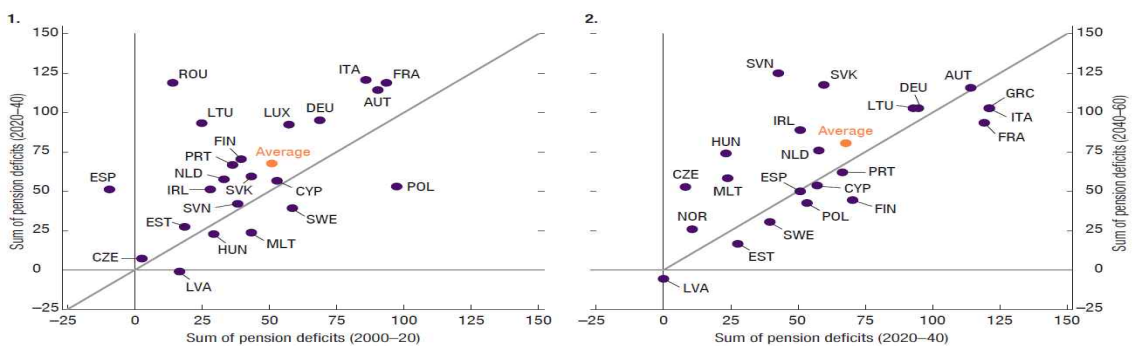
[그림] EU 회원국 중위연령 평균 추이: 5.1년 증가(2019년 43.7세 → 2070년 48.8세)



[그림] EU 회원국 합계출생률 변화 추이(2019-2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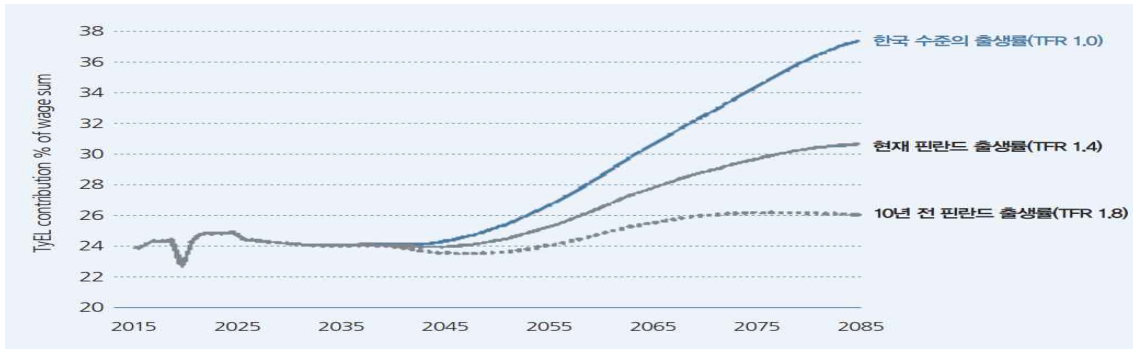
[그림] EU 회원국들의 2060년까지 연금 누적적자(Cumulative Deficits) 추이



주: 대다수 EU 국가들은 누적적자가 크게 증가하지 않음. 스웨덴 등은 장기적으로 누적적자 감소함.
 출처: IMF staff calculations (Pension Reforms in Europe,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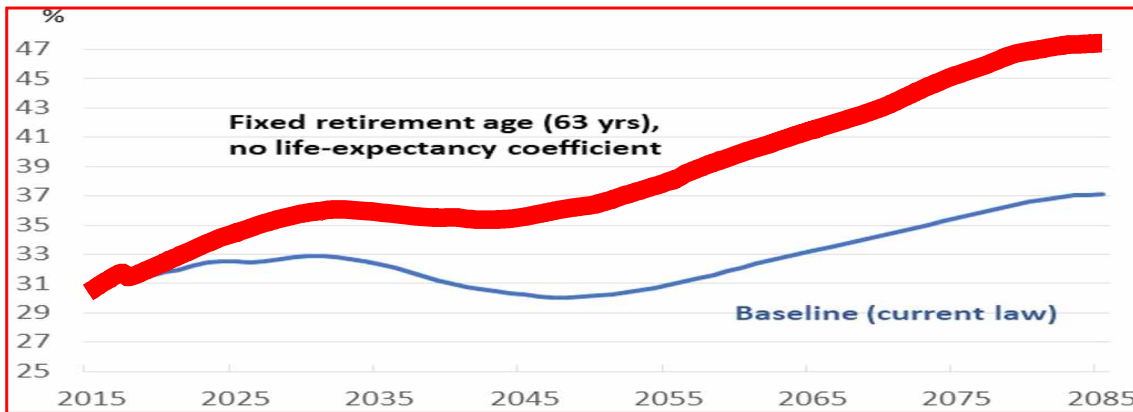
- 외국 전문가들의 평가 (2024년 OECD Pension Experts Meeting 참가자 등)
 - 한국 연금제도가 지속 불가능한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그림] 출생률 변화가 핀란드 소득비례연금의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주: 한국 출생률(TFR 1로 가정)과 핀란드 현재와 과거(10년 전) 출생률을 적용할 경우의 예상 보험료
 원자료: ETK Acting 의장인 Mikko Kautto(2021)가 본 진술인 요청으로 특별 작업하여 추정된 수치임.

<핀란드 소득비례연금 장기 전망 : 준자동안정장치인 기대여명계수를 도입하지 않고, 연금수급연령을 63세로 고정시킬 경우 - 47%까지 보험료를 인상해야 함!>



원자료: Ismo Risku (2022), Finnish Centre for Pensions. 윤석명 외(2022)에서 재인용

- 이즈모 리스쿠(Ismo Risku) - 핀란드 국가공인 계리사로 ETK 기조실장
 - 봄철에 농부가 게을러 적기에 작물을 심지 못하면, 가을에 수확할 곡식이 없음.
 - 그런데 한국인들은 미래 연금지출로 사용될 소요 재원을 현재 시점에서 너무도 적게 준비하고 있음. 이는 재정계산과 국제 비교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음.
 -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음에도 현재 소득 대비 너무 적은 액수만을 저축하고 있는 것임.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연금제도는 미래에 제대로 연금을 지급하기가 어려움. 이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임.

- **미카 비드룬트(Mika Vidlund)** - 핀란드 연금센터 대외협력 담당관의 '44% 소득대체율-13% 보험료율'안에 대한 평가(2024년 6월 19일 국회 의원회관)
 - 40% 소득대체율 유지를 위해 국회에서 논의된 **13%**가 아닌, **15%** 이상으로 더 높여야 함. 개혁이 지연되는 만큼 미래 세대에게는 더 많은 부채가 전가됨.
 - 기대여명계수를 활용하면 보험료 인상 폭을 줄일 수 있음.
 - 개혁 대안으로 핀란드식 또는 더 급진적인 스웨덴식 개혁까지도 고려해야 함. 단 개혁은 빠를수록 좋음. **핀란드는 연금 지급보장 조항이 없음.**
- ※ (국회 연금개혁 논의 소식을 접한 뒤, 최근 본 진술인에게 보낸 이메일)

Looking forward how the pension reform process will proceed in Korea. I hope that **the opposition party will understand the message and the calculations you have put forward and are able to come to a somewhat reasonable conclusion.**
- **노르웨이 통계청 소속의 헤르만 크루제(Herman Kruse) 박사**(노르웨이 연금 재정 추계 담당. 2024년 6월 19일 국회 의원회관)
 - 노르웨이는 2011년 개혁(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 도입)으로 연금제도 지속가능성이 크게 향상되었음.
 - 총 근로소득 기준으로 **18.1%** 소득세가 근로자 개인의 연금계정에 적립되며, **연금 소득대체율은 42%임.** 우리 두 배 넘게 부담하는 데도, 우리 수준으로 지급함.
 - 투명하게 연금개혁 논의과정을 운영하고, 중립 성향 전문가 견해를 들으면서 정치적 해결책을 찾다 보니 큰 규모의 개혁을 쉽게 할 수 있었음. 이 점이 한국에 보여 줄 수 있는 교훈인 것 같음.
 - "정치인이 제대로 된 연금개혁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 '소득대체율 40% - 기여율 9%'의 한국 연금제도는 지속 불가능. 기여율을 더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며, 소득대체율 높이려면 기여율을 훨씬 더 높여야 함.
- **호주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대학 조지 쿠드르나(George Kudrna) 박사**(2024년 6월 19일 국회 의원회관)
 - 호주의 유일한 공적연금인 기초연금은 정부 재정으로 재원을 조달함. 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한 자의 약 25%가 자산조사로 수급자격을 박탈당함.
 - 현재 GDP 대비 3% 미만인 기초연금 지출액은, 인구 고령화 추세에도 GDP 대비 2%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호주 기업연금(Superannuation)의 연금액에 대한 연금조사에 기인함. 기업 연금으로 공적연금 지출 수요가 빠르게 줄어들어, 2060년 이후에는 호주 유일한

- 공적연금인 기초연금 지출액이 GDP 대비 2%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 한국 기초연금은 장기적으로 GDP 대비 3.2%로 예상되어 호주와 크게 대비됨.
 - 호주도 순소득 기준의 노인 빈곤율은 매우 높음. 그런데 자가 주택(비용 및 추정 임대료 포함)을 고려하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10%로 크게 하락함.
 - 가처분소득 기준의 노인 빈곤율은 매우 높으나, 노인 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큼. 높은 노인 빈곤율 해결을 위해서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 권고하였음. 지금보다 더 잘 조준된 선별적인 기초연금으로 노인 빈곤율 낮추는 방안을 제시함.
- 파리 OECD 사무국의 앤드류 라일리(Andrew Reilly) 연금 분석관
-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3%' 연금은 지속 불가능함. 40% 소득대체율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13% 이상으로 보험료를 더 올려야 함.
 -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환영함. 전 근로기간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게 하여, 연금액을 최대한 늘릴 수 있게 해야 함.
 -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제거하되, (저소득자와 취약계층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더 강화해야 함.
 - GDP 대비 연금 지출액 전망치가 포함된 'Pensions at a Glance 2023'에서 한국은 국민연금만 고려했음.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이 포함되면, 7.5%(2060년)보다 훨씬 높아질 것임.
 - 한국 정부가 기초연금,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장기 전망치를 공표한다면, OECD 발간 보고서의 GDP 대비 연금 지출액에 이들 모두를 포함시킬 것임.
 - (OECD 회원국 중 공적연금을 완전히 분리하여 운영하는 국가는 우리 포함하여 4개국에 불과함. 본 진술인 추산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공적연금 지출을 포함한다면, GDP 대비 지출액이 15%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 앤드류 라일리 연금 분석관은 OECD의 Pensions at a Glance와 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s: Korea(2022) 공동 저자임. 한국 정부가 모든 공적연금의 장기 전망치를 공식 보고서로 발간한다면, 그 수치가 반영된 GDP 대비 연금 지출액 전망치를 OECD 보고서에 수록하겠다고 약속하였음.
- 일본 연금 업무 담당 공무원 → 한국 공적연금에 대한 질문
- 일본(18.3%)보다 보험료를 훨씬 적게 부담하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연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일본 연금 소득대체율 50% 보장은, 부부 동시 받는 기초연금(국민연금)과 남편 후생연금액 합계임.)

○ 일본 공적연금액 수준(2021년말 기준)

- 국공제(국가공무원연금)가 월 17만 2천엔, 한화로 월 160만원 수준, 지공제(지방공무원연금) 월 17만 6천엔, 사학공제(사학연금) 월 17만 6천엔 수준임.
- 우리나라 공무원·사학연금 평균액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 이렇게 운영함에 따라, 2115년에도 22.9조엔(약 200조원, 2019년 현재가치)의 적립금을 보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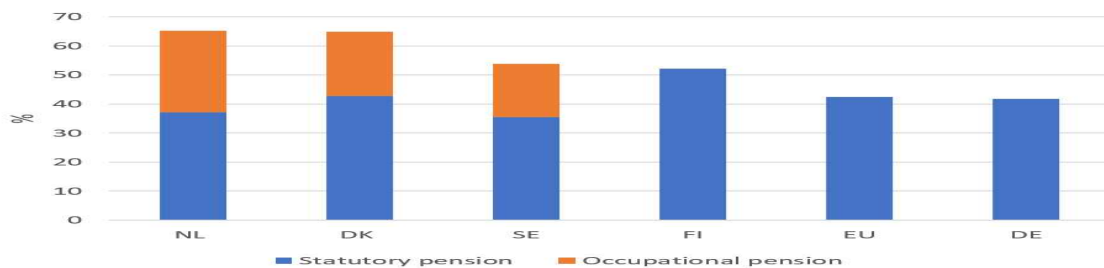
일본의 사학공제 등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액 비교 (추정치)

区分	旧厚生年金	国共済	地共済	私学共済	厚生年金計
平均年金月額 (令和3(2022)年度末) (老齢基礎年金分を含む)	円	円	円	円	円
計	143,965	172,596	176,092	176,053	148,680
男性	163,380	175,911	182,719	191,681	166,087
女性	104,686	155,830	164,735	152,416	113,317
女(男=100)	64.1	88.6	90.2	79.5	68.2

주: 18.3% 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평균액이 월 160만원 수준임,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을 합한 평균액은 월 140만원 이하임.

출처: 社会保障審議会年金数理部会(2021). 第3回社会保障審議会年金部会(2023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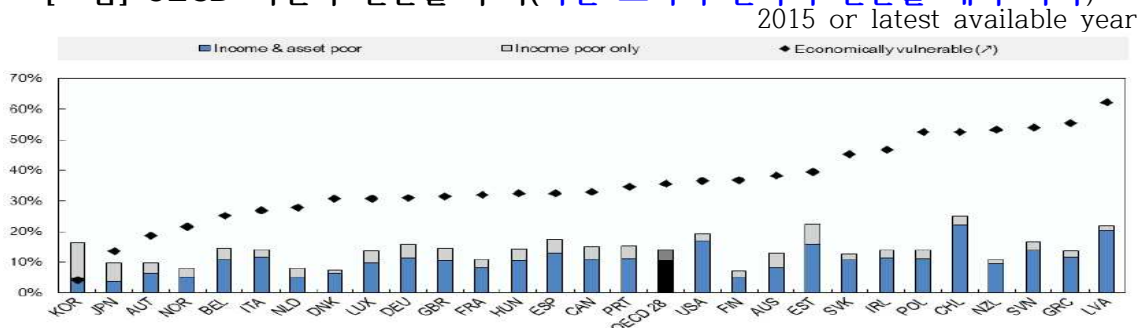
[그림] 유럽 5개국과 EU 회원국의 연금 소득대체율 현황



주: 노후소득 대부분을 공적연금에 의존하는 핀란드 소득대체율이 50% 수준으로 가장 높으나, 24.4%에 달하는 보험료 부담. 보험료 18.6%를 부담하는 독일 소득대체율이 40% 중반, EU 회원국 전체의 소득대체율 역시 4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임. 특히 네덜란드와 스웨덴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40%에도 못 미치며, 기업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으로 나머지 노후소득을 보충하고 있음.

원자료: Finnish Centre for Pensions의 Vidlund Mika, 윤석명 외(2022a)에서 재인용

[그림] OECD 회원국 빈곤율 추이(자산 고려시 한국의 빈곤율 대폭 하락)



Source: OECD Wealth Distribution Database, oe.cd/wealth.

- 캐나다는 150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재정평가(사실상 무한대 기간의 재정평가)를 실시하며, 150년 뒤에 가서도 연금을 지급할 준비금 100%를 확보하고 있음.

<표> 캐나다 소득비례연금(CPP) 재정평가기간 (1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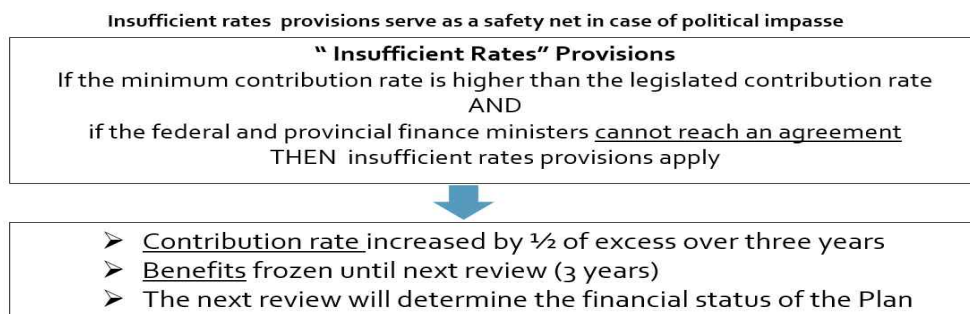
(단위: 9.9% contribution rate, \$ billion)

	Length of the Projection Period in Years					
	75	100	125	150	175	200
Toal Assets	2182	2374	2484	2547	2583	2604
Total	2090	2326	2465	2546	2594	2622
Asset excess(shortfall)						
Total Assets as a	92	48	19	1	(11)	(18)
Percentage of Total	104.4%	102.1%	100.8%	100.1%	99.6%	99.3%
Obligations(%)						

주: 150년 뒤 연금지급금 100% 보유. Office of the Chief Actuary(Actuarial Study No.19, 2018)

- 캐나다 **CPP**는 재정안정화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Insufficient Rates” Provisions**이 있음.
 - 다음 재정계산 전(3년 동안)까지 부족한 보험료 50% 인상과 3년 동안의 급여동결을 자동적으로 시행하는 규정임.
 - 3년 내에 재정안정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는 재정추계 주기가 3년이기 때문임.

[그림] 연금개혁 소홀히 할 때 적용할 강제적인 연금재정 안정화 규정



자료 Michel Montambeault. Office of the Chief Actuary, OSFI, Canada. 2022.

- 우리는 모든 공적연금제도의 부담과 급여 지급율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 매년 연금 총당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주요 선진국은 이 비용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부담함.

□ OECD 회원국 70%가 자동안정장치 도입

	적립식 DC	NDC	DB 또는 포인트 제도	재정, 인구통계, 입금과 연계	연금수급연 령과 기대수명 연계	자동연계에 영향받는 소득대체율 비율
호주	○					99.8
덴마크	○				○	100
핀란드			○		○	100
독일				○		100
이탈리아		○			○	100
일본			○	○		100
한국						0
네덜란드				○	○	100
스웨덴	○	○		○		100

원자료: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9, 윤석명 외(2020)에서 재인용

2. 연금제도 개편 방향 (2022년 9월 OECD 권고 내용과 유사)

- 한국의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보편적인 제도 적용, 급여 적절성, 제도 지속가능성 문제를 균형 잡힌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
- 여러 정책 목표 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필요
- 자동안정장치 도입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
 - 연금정책과 사회정책을 철저하게 분리. 기여형 국민연금제도는 지속 가능성에 초점
 - 취약계층에게 최저소득 (사회정책) 또는 최저연금(연금정책) 보장
 - 취약계층은 가입기간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차등 적용하여 장기 가입 유인 제공. Equivalence principle을 훼손할지라도, 정책적으로 유의미
 - 소요재원은 기초연금 개편 통해 절약될 정부 재정투입으로 해결
- 자동안정장치 도입으로 인해 초래될 노후소득 감소문제는 노동시장 개혁과 결부하여 노동시장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의 적절성 문제 해결
 -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한 점진적 퇴직 활성화 방식을 채택
 -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더 일해서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빠른 보험료 인상 추진과 소득비례연금으로의 전면적인 개편
 - 보험료 인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소득비례연금으로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
 - 10년 내 빠르게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포인트

- **더내고 더 받는 연금제도 개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여야 함.
 -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이 아닌, 소득인정액 확대와 가입연수 확대로 해결
 - 연금제도로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보니, 노동시장 개혁과 병행
- 세금을 투입하는 정책은 연금정책이 아닌 **사회정책 관점에서 접근**
- 다층소득보장제도 활성화를 통한 **중간 이상 소득자들의 자조 노력 촉진**
 - 점진적 퇴직연금 강제화로 OECD 소득대체율 산정기준에 부합시킴.

□ **한국 노인소득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필요**

- 과연 한국의 노인 대다수가 OECD 통계처럼 빈곤한가? (**평균의 함정**)
 - **너무도 왜곡된 한국, 노인 빈곤율을 제대로 바로잡을 필요성 시급**

3. 국민연금제도 개편 **대안별 재정전망**

□ 국민연금 모수 개편안별 재정전망 (1)

	최대적립 기금시점	기금소진 시점	부과방식비용률			
			2080년	2093년	소진시점	
재정안정화안 (보험료율 15%, 대체율40%)	2052년 (3,355조원)	2071년 (△ 65조원)	35.0%	29.8%	33.7%(71)	
소득보장안 I (보험료율 15%, 대체율 45%)	2050년 (3,185조원)	2068년 (△227조원)	39.1%	33.4%	36.6%(68)	
강한 재정안정화안 (보험료율 12% , 대체율 30%)	① 소득비례형	2048년 (2,684조원)	2069년 (△268조원)	27.6%	23.1%	27.3%(69)
	② A값유지	2049년 (2,709조원)	2070년 (△231조원)	26.7%	22.4%	26.5%(70)

자료: 국회연금개혁특위 내부 자료

□ 국민연금 모수 개편안별 재정전망 (2)

- 주요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50%안) 보험료율 13% - 소득대체율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율 매년 0.3%p 인상('25~'36). '37년에 0.4%p 인상, 소득대체율 일시 인상('25) ○ (12%-40%안) 보험료율 12% - 소득대체율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율 매년 0.3%p 인상('25~'34), 소득대체율 40%('28년 이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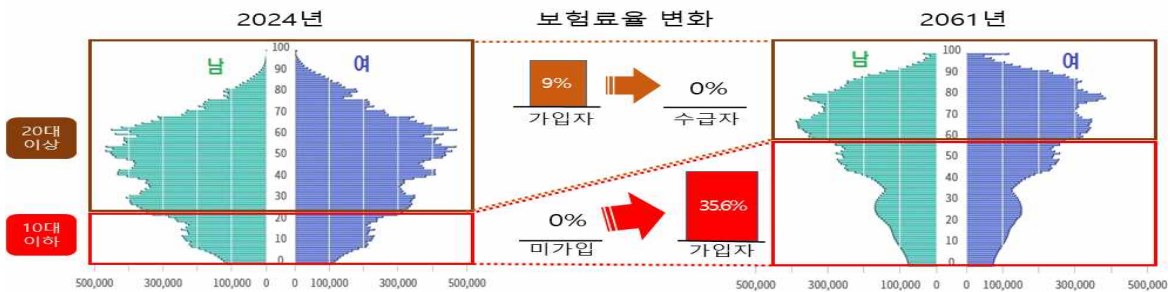
○ 재정추계 결과

구 분		기금 소진	부과방식비용률		수지차 '93년	GDP 대비 총지출	
			최고	'93년		최고('83)	'93년
현행	9%-40%(5차 재정계산)	2055년	35.0%('78년)	29.7%	-773조원	9.5%	8.8%
13%-50%안	13%-50%	2061년	43.2%('78년)	37.1%	-899조원	11.8%	11.0%
	13%-50% + 가입연령 64세	2059년	45.4%('81년)	38.2%	-1,028조원	13.5%	12.3%
12%-40%안	12%-40%	2062년	35.1%('78년)	29.7%	-666조원	9.6%	8.9%
	12%-40% + 가입연령 64세	2060년	36.8%('81년)	30.7%	-765조원	10.9%	9.9%

* 의무가입상한연령은 현 59세에서 2025년 이후 2년마다 1세씩 상향 가정. 출처: 복지부 국회 연금특위 제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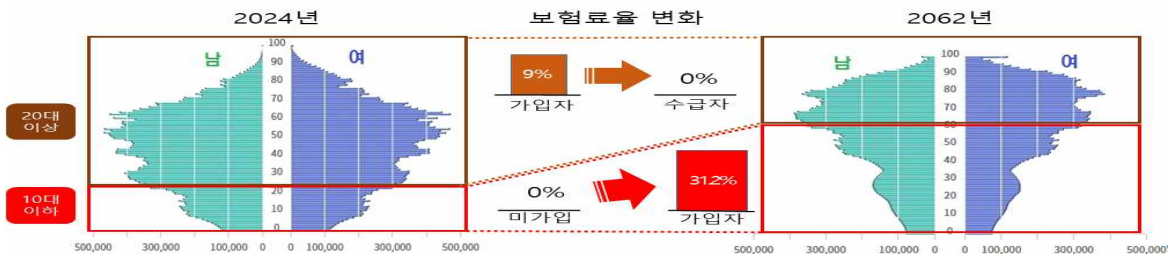
□ 국민연금 모수 개편안별, 세대간 평균보험료율(부과방식비용률 적용 시) 부담 비교

○ 보험료 13% - 소득대체율 50% 안



2024년 연령대	현재 보험료율	2061년 보험료율 (기금소진 시점)	2078년 보험료율 (최대 보험료 납부 시점)
20대 이상	9%	0%(수급자)	0%(수급자)
10대 이하	0%(미가입)	35.6%(부과방식비용률)	43.2%(부과방식비용률)

○ 보험료 12% - 소득대체율 40% 안



2024년 연령대	현재 보험료율	2062년 보험료율 (기금소진 시점)	2078년 보험료율 (최대 보험료 납부 시점)
20대 이상	9%	0%(수급자)	0%(수급자)
10대 이하	0%(미가입)	31.2%(부과방식비용률)	35.1%(부과방식비용률)

출처: 복지부가 국회 연금특위의 공론화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4. 국제기구의 우리나라 연금 재정전망

- 2023년 11월 16일 공개된 IMF의 우리나라 공적연금 관련 내용
 - 인구 고령화와 연금제도로 인해, 2070년 국가부채 비율이 GDP 대비 200%에 달한다는 내용
 - IMF 분석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기초연금이 포함됨.
 - 연간 연금지급율(Annual accrual rate)이 1.0(40년 가입기준 40% 소득대체율)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재 9%에서 **13.8% 포인트 추가 인상한 22.8%**가 되어야, 국민연금에서 기인하는 국가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함.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절반으로 낮추거나, 또는 연금수급연령을 6년 연장하는 조치 하나만을 각각 채택할 경우에는, 여전히 GDP 대비 국가부채가 증가함.

<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 수단들 조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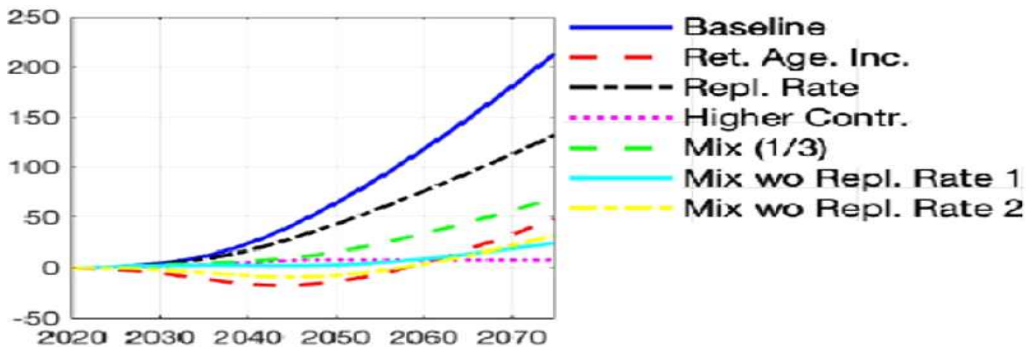
Variable	Measurement	Steady-state level	Higher retirement age	Higher contribution rate	Lower replacement rate	Mix of policies (example 1)	Mix of policies (example 2)	Mix of policies (example 3)
Retirement age	Year	67.9	6	0	0	2	2	4
Contribution rate (employee + employer)	Percentage point	12.8	0	13.8	0	4.6	9.2	4.6
Gross replacement rate	Percent (as a share of wage)	22	0	0	-10	-3.3	0	0

출처: IMF Staff Report for the 2023 Article IV Consultation.

- 균제상태(Steady-state level)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연금수급연령을 67.5세로 연장하고, 보험료는 12.8세로 인상하며, **소득대체율을 22%¹⁾로 하향 조정하는 조치를 동시에 취하여야 함.**
- 상기 정책 수단 중, 하나 또는 2가지 조합만으로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함.

[그림] 재정안정조치 대안별 향후 50년 후(2070년) 국가부채 비율 전망

(단위: % of GDP)



출처: IMF Staff Report for the 2023 Article IV Consultation.

- 외국 제도운영 현황과 국내외 재정 전망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인상은 불가능한 대안임.**
 -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되, 의무납입연령 5년 연장으로 소득대체율 5%pt 인상효과 유도

1)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22%는 A값 기준(2023년)의 42.5%가 아닌, 한국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소득대체율을 의미함.